

제43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6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1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양부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행안부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순서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 간에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10시02분)

○소위원장 양부남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안부차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가 민생 현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252억 원, 고용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제공과 돌봄, 문화, 환경 등 지역사회 공공 사각지대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95억 원 또한 각 지방정부의 민생안정,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 6793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차관 소관 심사 대상을 1건씩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1번,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차관 소관으로 오늘 총 7개 사항이 있고요 부대의견 8개 사항이 있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연번 1번 사업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등에 대한 비용에 소요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총 세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7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모경종·양부남 위원님은 573억 원, 그리고 2쪽에 보시면 이광희·이성권·이해식 위원님은 177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1·2번 쪽지에서는 공공시설물 정비하고 청사 재배치 금액이 포함돼 있어서 그 금액이 큰데 맨 마지막 세 번째 쪽지에서는 그 금액이 빠져 있어서 금액 다운된 측면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쪽지에서는 시스템 정비를 한 93억 원만 넣었는데 1·2번 쪽지에서 160억 원으로 넣어서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기본적으로 정부 추경안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예산인데요. 아시겠습니까만 시도 행정통합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에는 저희는 공감은 하는데요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인데요.

○소위원장 양부남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차관님, 정부안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다가 정부안에서 빠졌지요? 기획예산처에서 잘렸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은 전쟁추경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보니까 행정통합은 거기 목적에 조금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게 재정당국의 당시 의견이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이게 모두 지자체 소관이다, 업무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추경의 목적에 결부되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저희는 행정통합에 있어서는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청원이라든지 이전에 마창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액수도 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 잘하셨대요. ‘지방교부세 9.7조, 지방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1.3조 하나까 지방에 많이 가는데 지방 재정으로 하면 되지 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가 그만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빠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집어넣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다만 광주·전남이 통합을 하려는 목적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열악한 여건,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서범수 위원**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방교부세 많이 들어가니 지방에서 크게 부담될 게 있느냐, 그것으로 하면 안 되냐, 통 치면 안 되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보거든요. 지금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많이 가잖아요. 8.4조나 전체로 더 들어가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서범수 위원** 전체가 그렇지요. 저도 압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충당하면 되는 거지 굳이 국비에서 이것을 또 해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기획예산처에서 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기획예산처도 행정통합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한 측면이 있고요.

○**서범수 위원** 그런 것은 알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또 보면 여기 한 500억 정도고 광주·전남에만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차관님, 우리가 행정통합 할 때 두 가지를, 지방 재정지원 TF를 만들어서 행정통합을 지원하겠다, 총리가 얘기한 5조 부분을 지방 재정지원 TF에서 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특별법 할 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통합 비용이니까 미리 전체 세팅해서 재정당국하고 ‘5조 주는 것에서 미리 500억 먼저 끌어다가 쓸게요’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여기 국회도 보고하고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그 TF는 청와대 내에 정책실장 주재로……

○**이달희 위원** 아니, 같은 정부인데 따로따로 이 팔 흔들고 저 팔 흔드니까…… 통합이 돼야 되고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국회의 이런 과정에서 그런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5조를 지원하는 것은 확실하게 공표가 된 사항이니까 맞는데 5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될지는 현재 정부 내에서 고민하면서

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던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500억만 빼서 먼저 지원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반대할 일도 없지요. 지방교부세 이번에 많이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하라고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일단 7월 1일부터 출범은 해야 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 전체에서 5조 주기로 약속한 것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정부나 청와대 간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빨리 조율하고 7월 1일 날 출범해야 되는데 그리고 1년에 5조 주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그러면 광주·전남의 시도민들은 이 돈이 창고에 있다고 볼 것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조정해 가지고 잘 출범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통합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전남·광주 통합 얘기 나오면 가슴이 너무 쓰리고 아프기는 하지만 어쨌든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통합 지방정부 재정 TF가 만들어져서 5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하고 이게 6월 정도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빼서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추경액에 담냐, 더군다나 이번 추경은 전쟁추경이기 때문에 이게 좀 성격이 안 맞다. 그리고 재정당국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통합 재정 TF가 6월쯤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5조를 만들겠다는 게 결정이 되면 실제 5조는 내년부터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아까 다른 통합 지방정부도 통합 지방정부에 원래 내려보내기로 한 재정 말고 통합 전에 통합을 위한 비용은 내려보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려가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7월 1일부터 통합을 하는데 관판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경비를 좀 미리 내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지금 우리가 안 가 본 길을 가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해 주셔야지 지방정부가 통합하는 데 훨씬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반성문을 좀 쓰셔야 되겠네요.

지방교부세 지금 여러 말씀 하시는데 총액으로는 한 10조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행안부가 사점 몇 조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4.7조고 구점 몇 조입니다.

○**박정현 위원** 전체가 9.7조고 행안부 소관으로 내려가는 게 4.7조 정도 되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왜냐하면 교육부로 가는 게 한 절반, 거기가 이십점 몇 되기 때문에 있고요 저희가 19.24%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 4.7조는……

사실은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역경제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다운돼 있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안 좋습니다.

○**박정현 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지금 집중적으로 쓰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통합에 들어가는 경비도, 이게 뭘 만들고 하면 지역의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실제 이 돈의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정시스템이라든지 표지판, 간판 같은 것 정리라든지 공공시설물 정비 이런 쪽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사용 용처와 지금 지방에 내려가는 4.7조 원에 대한 사용 용처가 다른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내려보내는 게 훨씬 낫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되면 행정당국은 충분히 설득이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합의를 하셨어요? 여기 지금 보면 저도 그렇고 500억 정도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 덜어 내고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77억입니다.

○**박정현 위원** 177억 정도가 있는데 이 사이에 어느 정도, 이런 게 행정당국하고 좀 합의된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전에 합의된 부분은 아니고 아까 국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통합의 비용도 필요하고 7월 1일까지 가려면 마침 추경을 하게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담기보다는 추경에 좀 담아 줬으면 하는 것을 저희가 의견을 잘 제시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추경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입장 때문에 추경안에서 빠지게 됐고요.

다만 여기 행안위에서는 그래도 광주·전남이라든지 열악한 데 그리고 또 통합법도 굉장히 빠른 시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특례를 담아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또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들이 잘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예결위에서 장관님하고 저도 포함해서 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2차 추경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6월 안에 2차 추경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추경은 정부 추경도 있어야 되지만 지방정부도 추경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5월, 6월에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이번 정부 추경이 되면 최대한 빨리 4월 말 5월 초까지는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통합지방정부협의회가 이제 움직이니까 그 전에 필요한 조치들은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먼저 고동진 위원님 의견을 들어 봅시다.

○**고동진 위원** 5조라고 하는 예산이 내년부터 잡힌다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일정 부분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디테일하게 이것 살펴봤을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500억 이상 들어가는 데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비가 160억으로 똑같아. 그런데 뒤에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비가 데이터 통합하고 통합초기 필수지원 비용 합쳐 봐야 47억이에요. 그러면 시스템 통합에 따르는 행정시스템 고치고 이러는 데 두 안이 113억 차이가 나거든. 이 정도는 조사해 봤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고동진 위원** 업체들, 전남·광주 시스템을 갖췄던 그런 회사들한테 이야기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시스템 하는 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보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드렸다고 576억 5000만 원, 573억 원 그리고 177억 정도가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고동진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500억대는 광주·전남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신청을 한, 추산을 한 금액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은 밑에 한 177억 정도면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억하고 177억은 너무 차이가 큰 것인데. 추경이라고 해서 그냥 막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앞에 보면 두 건은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 뒤에 보면 정보시스템 데이터 통합이 34억하고 13억, 합하면 47억이거든. 왜냐하면 시스템을 통합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그런 것은 크게 안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6개월 쓴다 그러면 한 삼사십억이면 상당히 괜찮지 않은가. 그래서 예상하더라도 너무 널널하게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그 의견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채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7월 달에 출범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7월 1일.

○채현일 위원 출범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570억 정도의 비용이 지급이 안 되면 출범을 할 수 없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출범을 해야 되지요.

○채현일 위원 출범하는 데 애로가 많지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예비비 같은 것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추경이라는 게 전쟁추경이지만 긴급상황이고 또 이게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는 긴급한 상황이고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도 행정 공백을 막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채현일 위원 막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부세,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자체별로 지방교부세가 한 150억 정도 지원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같은 경우도 해당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매칭을 10% 정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광주·전남 통합시에서 이 비용을, 교부세를 지자체 통합 쪽으로 가 버리면 나중에 고유가 피해대응금 할 수 있는 그것도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채현일 위원 그래서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이번에 통합 또 지방 소멸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말씀하십시오.

○서범수 위원 차관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게 행안부만 관심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기획예산처는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부의 기획예산처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정부의 기획예산처라고 봐야지요.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가 이걸 잘랐다고요. 왜 잘랐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방 그런 말씀도 있고. 이거 지금 굳이, 나중에 어느 정도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안 잘랐겠습니까?

만약에 기획예산처가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가 아니고 다른 거면 내가 모르겠지만

행안부는 ‘하자’, 돈을 줄을 주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안 돼, 이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굳이 지금 추경에 안 넣어도 돼’ 이 판단하에 자른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처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그냥……

그러면 기획예산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하는 데 반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도 뻔히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추경과 관련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예산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자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맞춰서 이런 부분이 있고 국무총리실에서 TF 만들고 이걸 지원, 총리실 안에 무슨 지원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행안부에도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 행안부에 지금 지원단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명확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고 통합 지원하는 데 행정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이라도 해 주고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덜렁덜렁 들어와 가지고 ‘이거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기획예산처에서 이 부분은 잘랐다고 봐요, 행안부의 입장도 내가 알겠지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요. 행안부나 위원님들은 광주와 전남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기획예산처는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인데 아무래도 중앙의 논리가 좀 더 있는 거지요. 저는 그 차이라고 보고요.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게 그러면 전남과 광주만의 문제입니까? 중앙정부의 문제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추진하는 현안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예산처는 따로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관심이 있겠지요. 이걸 어떻게 성공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는 부처겠지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다. 저는 그리 판단이 되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위원님들……

○**소위원장 양부남**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고 하니까, 제가 잘 들었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일단 차관님,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지 약자가 없습니다. 국힘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건 2020년부터 그렇게 정해 놓은 법칙이니까요 좀 지켜주시고요, 어쨌거나 공식적인 회의 자리니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김성희 위원** 일단 이런 행정통합을 할 때 마창진 포함해서 예전에 국가가 지원했던 사례는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청주·청원 다 국비 지원됐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번에 안타깝게도 대구·경북이 통합에 못 들어와서 그렇지만 사실 대

구·경북도 통합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으면 똑같은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게 잘 돼야 이 다음번에 통합을 하는 자치단체들에게도 똑같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기재부는 전쟁추경인데 전쟁추경 아닌 거 못 꺼 주겠다는 입장이 강했던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게 기획예산처 입장이었는데요. 광주·전남은 특히 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곳이라서 그 상황에 그게 되겠느냐라는 입장을 저희가 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관찰시키지 못한 걸 좀 송구스럽게……

○김성희 위원 그건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마창진은 그러면 지방채 낼 방법이 없어서 국비를 지원했던 건 아닐 테니까 저희가 국가적으로 광역 통합을 운영해 보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동의한 지자체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말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재정 상태 말씀하셨지만 전남이 지금 예비비가 75억, 광주가 65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걸로 알아서 그런 돈으로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태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정확합니다.

○김성희 위원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예산이 좀 풀려서 지방세가 내려간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은 그게 주민들한테 돌아갈 돈인데 광주·전남은 이걸 가져다가 행정통합 비용에 쓰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좀 증액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말씀, 이달희 위원님·고동진 위원님 말씀을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니까 교부금 많이 내려가는데 이번에 그거 갖고 쓰지 그러냐 하는 말씀하시고 또 5조 원씩 인센티브 주는데 그 돈을 좀 당겨서 쓰면 어떻겠냐는 말씀 같습니다. 또 왜 똑같은 이재명 정권인데 기재부에서는 승인 안 한 것을 행안부에서 나서서 이러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또 5조 원씩 주는 인센티브도 당초 우리가 출범할 때 이 돈을 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데 집 단장하라는 돈이 아니고 그 지역의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라는 게 국가에서도 얘기했고 지방주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르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고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140억밖에 안 돼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이번 추경에 전쟁예산 이렇게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7월 1일 출범해야 되니까 제 생각은 이번에 우리가 증액을 해 주는 게 낫겠다. 다만 금액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고동진 위원 증액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소위원장 양부남 금액은 우리가 576억, 그러니까 1안으로 갈 것인지 2안…… 573억 원이나 576억 5000만 원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177억 3800만 원 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서범수

위원님, 어떠신가요?

○**고동진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77억 정도로 해서 가고, 왜냐하면 6개월 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하든가. 그런데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놓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양부남** 아니, 서범수 위원님, 해 주시지요.

○**서범수 위원** 저는 원천적으로 반대입니다만 마지막 안으로 가는 거는 뭐……

○**소위원장 양부남** 177억?

○**서범수 위원** 예.

못 받아 오면 어떻게 할랍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결위에서 또……

○**서범수 위원** 직을 걸랍니까? 난 못 받을 거 같은데.

○**김성희 위원** 아니, 못 받을 거 같으면 500억으로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일단 여기 소위를 통과 못 하면 가능성마저 없어지는 거고요. 해 주시면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서 위원님, 그러려면 우리가 576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깎여서 170 얼마가 됩니다.

○**서범수 위원** 안 됩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우리가 177억 38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서범수 위원** 차관님, 책임지세요.

○**소위원장 양부남** 이 사업은 177억 38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2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지원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2번 사항도 1번 사항하고 예산 성격상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가 중구·동구·서구에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서구로 이렇게 개편됨에 따라 개편 비용을 좀 지원하자는 건데요. 박스 보시면 자치구 개편 비용으로 4706억이 총이고 개편전환 사업비용 886억 원, 개편정착 사업비용이 3820억 원인데 요구된 안은 개편전환 사업비용 886억 원의 50% 중에 특고세 요청분 182억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261억 원이 증액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 할 때도 이 관련 비용을 금액은 증액 요구와는 다르지만, 예비심사 안에 포함돼서 갔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최종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감안해서 하시고요. 이 예산도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안에도 없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마찬가지로 신설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증액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당국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던 이유가 뭘니까, 논리가? 그렇게 제물포·영종·검단·서구 이걸로 다 바뀌게 되면 돈 들어가는 건 맞는데 예산처에서도 반영을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게 필요 없다고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기본적으로 지방 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줄 의무가 없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합일 때만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리 신설이거든요. 그래서 분리 신설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사안이다라고 해서……

○**고동진 위원** 여기 예산 현황은 행안부에서 알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작년에는 636억 원이 행안위는 통과해서 예결위까지……

○**고동진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여유라고 해야 되나? 버짓(budget).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여기 인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한 4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청사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갖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안에 들어간 거는 26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굳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김성희 위원님.

○**박정현 위원** 이거는 또 왜……

○**고동진 위원** 아니, 이게 싹 바뀌어 버리거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소위원장 양부남** 일단 말씀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이게 인구감소지역에 통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통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분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긴 상태인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고양시도 지금 선출직도 아닌 구청장 하나가 50만 명을 관할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일산 동·서구는 25만 썩인데 저희는 지금 50만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선출직도 아닌데, 고양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50만 명을 관할하는데 이게 곧 55만 명, 60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분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구한 것은 국가가 거기다가 갑자기 베드타운 만들어라 해서 창릉신도시니 뭐니 집어넣어 갖고 인구를 잔뜩 늘린 다음에 자기 몰라라 하는 것은 이걸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지원의 경우, 지금 검단구도 마찬가지로 인천도 사람들이 살려고 신도시를 만들고 신도시에 집어넣을 때는 그 정책은 국가에서 짜고 사람을 집어넣은 다음에 책임은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져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이달희 위원** 저도……

○**소위원장 양부남**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저도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재정 지원이 되도록 해 줬기 때문에 이 예산도 함께 수반하고 통합될 때 행정비용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리될 때

도 행정비용이 드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26년 7월에 시행한다면서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만약에 지금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추경이 없었다. 뭐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자체적으로 인천시하고……

○서범수 위원 그러면 할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해야 되는데……

○서범수 위원 할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애로사항이 많은 거였지요.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서범수 위원 이것 보내 주면 못 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작년에도 이것 못 했었습니다만……

○이달희 위원 그래도 보내 줘야지.

○고동진 위원 아니, 따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를 해 주는 거지.

○이광희 위원 아니, 법률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소위원장 양부남 다른 위원님들.

○이달희 위원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복원해 주고 돈은 안 주고……

○소위원장 양부남 저도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평을 하셨는데 통합한 것도 돈을 지원하지만 분구한 것도 국가 큰 정책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돈이 필요하고 작년 예산에서는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도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 없었으면 빛 얻어서 할 상황이라는데 추경이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면 제사도 지내는 거니까 저는 이번에 증액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달희 위원 공감합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원래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는데 반대하러 그러다가 딱 보니까 모 의원이 또……

○소위원장 양부남 그렇지요.

○고동진 위원 아, 마음이 약해져 버리네.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이 사업은 261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증액하는 것 반대하지는 않는데 앞에 전남·광주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우리가 177억 결정했고 그러면 이것은 통합이고 인천의 분리는 261억 증액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그러면 이게 괜찮습니까?

○소위원장 양부남 금액이?

○박정현 위원 예, 저는 전남·광주 통합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위원장 양부남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광주·전남 통합은 일단 새로 청사를 짓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광주·전남을 하는데 여기는 검단구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보건소도 만들어야 되고 청사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처는 그것은 순수하게 지방정부 청사 짓는 것은 자치사무 아니냐,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화가 나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자꾸 고양시 얘기해서 죄송한데, 고양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면 인구를 못 늘게 하기 위해서 법인 등에 중과세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지역이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다 10만 명짜리 아파트를 또 태연하게 들여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데……

여기 검단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서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나서 분구를 하는 건데 책임을 지방정부보고 지라는 것은…… 그러면 지방정부가 건설계획, 그러니까 그 안에 아파트 단지 어떻게 조성할지 그린벨트 어떻게 풀지까지 넘겨주고 나서 할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쥐고 있고 그다음에 베드타운을 만들어 놓고 그 뒷감당은 지방정부가 하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올해 화내는 것 처음 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261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3번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돼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동 사업은 이번 추경안 편성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5개월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근거 법률이 부재하고 조례로 청년 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 청년 정책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국비 보조율이 50%로 반영돼 있는데 80%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116억 19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국비 80% 지원 시에는 소요예산액이 309억 8400만 원이고요. 국비 50% 지원 시 소요예산액은 193억 6500만 원으로 그만큼 증액해 달라는 요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체회의 대체토론할 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액 감액을 주장하셨으니까 잘 설득하시고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일단 이게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고동진 위원 이게 위원장님이 편파적으로 진행……

○소위원장 양부남 아닙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취업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가치라든지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 이런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설명이 너무 간단한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이것 그때 반대했던 논리가 우리가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는 데 이것을 반대하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시다마는 청년일자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또 말을 바꿨어요, 첫 번째로.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5개월.

○**고동진 위원** 5개월짜리. 그러면 5개월 뒤에는 그 예산 지원이 끝나 버리는데 그 상실감을 어떻게 할 거며, 두 번째가 현재 이러한 청년일 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하는데 그것은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민간기업의 경우.

○**고동진 위원** 지방사회연대는 10인 미만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더더욱이 고용노동부가 그런 일을 수년 동안 해 왔으면 거기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고 뭐가 문제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그런 경험이 풍부하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인 이하까지를 커버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경험도 없는 행안부가 10인 미만을 가지고 청년일자리도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5개월짜리를 한다 그다음에 디테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반대했던 거고.

행안부차관한테 추가질의를 하면, 이것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디테일한 계획이 언제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강진에는 거기는 청년 별로 없으니까 나이가 60세 이상도 막 포함될 거예요, 지자체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동진 위원** 왜요, 그때 내가 장관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맞대요. 청년이 없는 지역은 60세 넘어가도 신청할 수 있게 해 준대. 그래서 말을 청년이라고 붙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도 했었어요.

어쨌든 각 지역별로 디테일한 계획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이 잘 설명하라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수용·불수용 이런 것 먼저 말씀드리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청년에 대한 일자리·일경험인데 그 청년들 중에도요 ‘쉬었음 청년’이라는 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보면 무려 75만 명의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러면서 구직 노력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 데이터는 다 알고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가치나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자라는 게 큰 취지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고용……

○**고동진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지역 단위별로 여기는 무슨 사업을 몇 명 대상, 여기는 무슨 사업 몇 명 대상 이런 계획이 언제 나오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계획은 지금 있고요.

○고동진 위원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러면 그거……

○소위원장 양부남 잠깐만, 2500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2500명을 뽑았는지?

○이달희 위원 그래, 그것 한번 보자.

○고동진 위원 그것 의원실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소위원장 양부남 지금 자료를 주세요.

○이달희 위원 지금 보여 주세요.

○고동진 위원 그래.

○소위원장 양부남 2500명이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말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2500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방으로부터 수요를 받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지방으로부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리고 이것을 행안부가 A부터 Z까지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정부가 우리 행안부의 큰 틀을 받아들여서 설계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과거에도 지주청 사업이라고 지역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유사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경험이 있고요. 이것이 2500명이지만 않습니까? 226개 시군구로 나뉘지게 되면 1개의 시군구 당 한 열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물론 저희가 비수도권을 더 우대하는 것으로 지금 전체 2500명 중에 한 70%는 지방의 청년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고동진 위원 말 끊어져서 미안한데, 260개 시군구에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226개.

○고동진 위원 그런 계획이 행안부로 언제 취합이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위원님들 예산을 확보해 통과시켜 주시면 26년 4월에 바로 지방정부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설명할 거고요. 그러면서 지침도 주면, 설명회는 5월에 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자기들이 사회연대경제주체 쪽에 몇 개씩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등의 그런 쪽에서 몇 군데 신청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산과 이런 부분을 주게 되면 청년 프로그램이든지 선발하는 것은 시군구, 기초지방정부에서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내가 너무 시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소위원장 양부남 괜찮습니다. 동의하시고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고동진 위원 고용노동부가 이런 일을 10인 이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 왔는데 왜 이것을 행안부가 또 끼어들어서 하려고 그러는지 첫 번째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고 저게 문제가 있고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였을 텐데,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경험을 해 보는 것, 10인

미만에 대해서……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그것 주관해서 일관되게 일을 하면 되는 거지 행안부가 낀다라고 하는 게…… 하여튼 그래서 내가 반대를 한 거예요.

○소위원장 양부남 차관님, 지금 고동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다 경험이 축적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면 될 일이지 왜 행안부가 나서냐는 것인데, 행안부가 이 사업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고용부는 이번 추경에 1000명이고요. 저희는 2500명입니다. 일단 규모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고용부는 민간기업이에요.

○소위원장 양부남 그렇지요, 영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1000명 민간기업에, 민간기업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혜택 보고요. 저희가 그냥 볼 때는 수도권의 민간기업에 더 많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고동진 위원님께서서는 고용노동부가 10인 미만도 하면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10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영리단체가 된다 이것이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그게 굉장히 작지요. 10인 미만에 할 때도 거기보다는 10인에서 20인 사이에 지원되는 1000명 금방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영리든 비영리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경험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취업하게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영리 쪽이든 비영리 쪽이든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문호를 넓히는 작업인데, 고용노동부가 노하우가 훨씬 더 많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제가……

○소위원장 양부남 잠깐, 그러면 조금 전부터 발언을 요청하신 김성희 위원님 말씀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상북도랑 점프라는 사회적기업이랑 추진했던 프로젝트 하나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6개월 동안 정주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서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고 경상북도 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경상북도에 살지 않는 청년들이 적정 금액의 지원을 받고 가서 일도 합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에서 일도 하고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결합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6개월 하고 나면 이 사람들 취업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겠지만 첫 번째,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학졸업반이거든요. 이제는 나가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인턴 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라고 항상 생각하는 게 어디 대기업에다가 이력서 내고 취직 이렇게만 되어 있지 마을기업이나 지역기업, 사회적기업에 취직한다는 경험에 대해서 청년들이 갖고 있지 못해서 기회를 못 갖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6개월 동안 경상북도에 내려가서 경상북도에서 살면서 주민들과 어울리고 이러는 경험 자체가 청년들에게도 도움되지만 또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다니던 그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결정한 청년

도 남아 있었고.

이것은 비단 경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여기의 주체는 어떤 기업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 아닌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에 들어가서 5개월 동안 경험을 해 보고 나서 ‘나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하는 게 내 보람도 찾고 돈도 벌고 좋겠어’ 하고 남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이력서에다 한 줄 더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한 다음에, 심지어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적기업에 가서 이런 봉사 경험도 했다고 해서 대기업에다가 취업 원서를 집어넣을 때도 이게 다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게다가 쉬었음 청년이라는 사람들은 특히나 구직의 의지를 아직 못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특히나 이번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1조 9000억 원의 취업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청년 취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숨 쉬고 있는 이 조그마한 사회적기업들을 보살핀다는 점에서 그것은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저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말씀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가끔 이제……

○이달희 위원 저도 아까 손 들었는데……

○소위원장 양부남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순서대로 합시다.

이달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아까 손을 들었으니까.

○이달희 위원 아니, 말씀하고 계시는데……

○소위원장 양부남 두 분이 정하시지요.

○이광희 위원 먼저……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이달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달희 위원 김성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프로그램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행안부가 지금 가장 간파하고 있는 게 쉬었음 청년 데이터가 지방과 수도권에, 아까 말씀이 쉬었음 청년들한테 일경험을 해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아까 그런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수도권 청년들이 지방에 가서 창업할 수 있는 체계를 해서 그 지역에서 창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이끌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그러려면 행안부가 잘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작년에 법이 겨우 통과했잖아요.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53억.

○이달희 위원 53억, 그러면 5개월 동안 청년들을 시군에서…… 시골 가면 쉬었음 청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도시 중심으로 쉬었음 청년들이 있지. 그 말 자체가 지역을

잘 모르는 멘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회적 경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다섯 개 프로그램 속에 지역에 내려보내면 한 10명, 20명씩 준다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 한 5개월 돈 주고 난 뒤에 어떡할 건가까지 마련해 놔야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청년들이 ‘나 여기 사회연대경제에 들어와서, 마을기업에 들어와서—인턴 개념이지요—5개월 해 보니까 나도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할 때 2차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내가 이런이런 창업을 하겠다 했을 때 지원이 같이 가 줘야 이게 영속적인 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부처 간에 경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까 고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고용노동부가 해도 이게 다, 기존의 사회적 경제도 행안부는 마을기업밖에, 마을기업도 이제 시작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훨씬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당겨 와서 한다는 게…… 이 부분에서 아까 차관님은 씩씩하게 ‘고용노동부는 1000명이고 우리는 2500명이에요’, 부처 간에 청년일자리 생색내기 너무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잘하는 부처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광희 위원 두 가지가 쟁점인데 한 가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역에 그만큼 대상이 되느냐 이런 건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 사업을 해 본 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MZ세대들의 현 상황에서의 쉬었음이 약 44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시 지역은 5만 9000명이고 군 지역은 25만 명 정도 됩니다. 군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을 고용노동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되게 답답한 게 있어요. 도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그냥 고용하면 되지 왜 그걸 안 해? 취업하면 되지 왜 니들 취업 안 해?’ 이렇게 아주 답답한 소리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쉬었음이나 혹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뭔가라도, 부모들 도움이라도 받고 하고 싶은데 없고요.

두 번째는 지역과 관련해서 수도권은 큰 도시일수록—여기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민간 지원 단체가 많습니다. 지역은 없어요. 그것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지원을 지금 하는 게 되게 급합니다, 사실. 제 자식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지역에서의 상황들과 현재 MZ세대들의 특성들 그다음에 지역이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가 그게 고용노동부…… 제 아내는 고용노동부에서 일하거든요. 거기에 오는 분들만 해도 고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차이가 좀 나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특성들을 감안해 주시면 이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으로는 굉장히, 얼마 못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한 2500명쯤 이번에 해 보면 이 성과를 가지고 내년에 아마 정상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시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성과 때문에.

그래서 고동진 위원님, 저를 한번 보시고 이것 통과를 좀 시켜 주십시오.

○소위원장 양부남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행안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 이게 지금 전쟁추경이라면서요? 전쟁추경으로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청년 정책 좋지요. 그런데 본예산

에 넣읍시다, 이것. 왜 이것을 지금 뭐가 그렇게 긴급하다고…… 긴급해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청년들 고용률 감소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것보다는 수년간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고,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전쟁추경에 이게 들어가는 것도 모양이 이상하고.

그다음에 필요성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부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하다가 종료됐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연속시켜서 좀 더 발전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또 신규사업을 갖고 들어오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과연 이 정책 본질과 맞느냐,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는 양질의 일경험 제공을 해서 다음 취업을 한다는데 10인 이하의 기업으로 과연 내가 전문가로서의, 멘티·멘토로서의 역할 지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에 대한 부분 아쉽지요. 그리고 해야 되긴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전쟁추경에 넣어서 이것을 슬쩍 2500명을 해서 어떻게 하자, 이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먼저 보면 이달회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이것은 이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2월에 성과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광희 위원님하고 김성희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과 유사한 겁니다. 이것은 고동진 위원님이 강조하셨다시피 무슨 쉬었음 청년들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보내자라는 것보다는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일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청년들에게 알려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기업에서만 취업하고 이래야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소위 워라밸도 느끼면서 공동체도 복원하고 여기서 얼마든지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소수에게 알려서 그것이 좀……

○소위원장 양부남 차관님, 서범수 위원님도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넣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뭐냐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서범수 위원 그리고 특히 신규사업을 지금 추경에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이게 맞냐 이거지,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무래도 국내……

○소위원장 양부남 이것을 해야 될 시급성·필요성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중동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도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하려던 것이 그 여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한테 또 다른 쪽에 있는 경험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결국은 전쟁 상황에

있을 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고 그 취약계층의 중심에 또 청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준비하던 것을 좀 더 앞당겨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차관님 말씀은 이게 전쟁추경은 맞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양부남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다, 그러면 쉬었음 청년이라든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거기에 포함된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 취약계층에 포함되고 특히 소기업, 사회적연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쟁 영향으로 인해서 취업 자체, 신규 채용할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전쟁 시기에서 더 필요하고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취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범수 위원 저는 이해 안 됩니다.

○고동진 위원 하나만 좀 더……

○소위원장 양부남 예, 질의하시지요.

○고동진 위원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가 제가 딱 청년인데 왜 47만 명이 늘고 있는가, 취업을 안 하고. 논다라기보다는 그냥 쉰다, 실업급여 받는 것, 치열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것.

그런데 김성희 위원님이 아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만 간다면 이것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상당수는 지금 행안부에서 준비해 놓은 플랜을 보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5개월 정도 인당 250에서 300만 원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1400에서 15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쉰 거라고. 물론 일부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플랜을 디테일하게 가지고서 이렇게 돈 쓰는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한번 해 봅니다. 지방에서 사회적기업……’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이 세금, 국민들 혈세 받아 가지고 이런 데다가, 그다음에 이게 청년들한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강진 같은 데는 55세, 60세 이런 사람들도 대상이 돼요. 지난번 전체 질의할 때 그렇게 됐다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데요.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없는 지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계획안에는 제주 같은 경우 40명입니다. 제주 인구가 50만 넘는데 거기서 40명 청년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강진 같은 경우, 전남 보면 100명이에요, 시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 10명도 안 되거든요. 그 청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전남 전체에서 100명이다, 이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지금 250을 220……

○고동진 위원 아니, 강진에다가 우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폭을 그렇게 늘려 놓으면 당연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50~60은 안

들어가게끔.

○소위원장 양부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번이 전쟁추경이 맞지요? 전쟁추경이 맞는데 전쟁추경의 내용 중에 여러 쪽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유가 부담이라는 게 가장 크고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면서 사실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정현 위원 그냥 지원만 해 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정현 위원 선제적 대응의 일환 중의 하나가 청년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고 이게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자리를 완전히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경험이 다양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보통 전문직 아니면 대기업 그리고 좀 내려가면 중소기업인데 사실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톨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선제적으로 좀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마중물 역할도 하자는 게 이 취지인 것 같고요.

실제 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청년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이 군 지역에 있는 청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 옆 지역에 있는,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내려가면 제일 좋지요. 가능합니다.

○박정현 위원 오히려 가는 게, 그렇게 좀 디자인을 만들어서 청년이 없어서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청년이 가서 5개월 동안 청년들이 막 움직이면 그것도 활력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군 지역에 가면 청년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지역에서 새롭게 좀 일자리를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고용노동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고용노동부와 지금 행안부는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는 그야말로 그냥 민간이나 사회적기업,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가 있고 행안부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실은 생산성도 있는 것이지만 실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인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청년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지역 문제 해결의 톨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남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오히려 청년들을 못 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5개월의 경험을 통해서 여기는 청년들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청년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전망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일자리가 추경에 왜 들어왔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번 추경이 어쨌든 전쟁 추경이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좀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차관님, 이번 추경예산안에 행안부에서 어떤 취업 사업을 하는 것 말고 다른 부처에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것은 무려 1.9조나 있고요.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극히 일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2.5%밖에 안 됩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다른 부처에서도 하고 있지요?

이달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달회 위원** 박정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러면 이게 생색내기, 나누어 주기 예산이 안 되려면 청년에 국한합시다, 39세로. 청년에 국한해야 도시 청년들이 모자라면 도시 청년을 유입하기도 하고 쉬었음 청년을 얼른 찾기도 하지 그냥 나누어 주기 식으로…… 우리 지역에 가면 일은 지금 마을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공무원들이, 사회적 경제를 책임지는 센터 공무원들한테 일이 그냥 그대로 내려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루즈하게 59세, 군 단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천몇백만 원 쓰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청년으로 국한해서 해 봅시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설명회나 지침 만들 때 39세 이하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아예 막아 놓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을 들었고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범수 위원님께서는 크게 문제를 지적하시는 게 이것을 왜 추경으로 넣었냐는 시기성이라든지 긴급성을 말씀하셨고 또 정부 측이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전쟁 추경에 가장 맞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청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려는 대상 기업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인 미만의 비영리단체야말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동진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는데—이달회 위원님도 지적하셨고—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 자체가 5개월이지만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서 경험을 얻어서 다른 기업으로 진출하는 데도 이 기업이 큰 토대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자기가 5개월 근무한 그 기업에 또 근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하셨고. 또 이달회 위원님께서는 2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한다니까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년을 몇 세로 할 것이냐. 지금 행안부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지역에 따라서 60세까지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달회 위원님께서 39

세로 정하는 게 낫다, 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정말로 이 예산안의 원래 취지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대상 기업은 그대로 하고 대상 청년을 39세로 정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아, 그러십니까? 충분히 설명이 안 됐습니까?

○서범수 위원 예.

○소위원장 양부남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합시다.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햇빛소득마을 확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5쪽입니다.

4번 사업인데요,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안에도 없는 요구 내용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공모하려는 사업인데요.

공모사업 대상 선정에 필요한 평가용역비와 추진단 임차료 등 운영비로 6억 17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이시고, 평가용역비와 추진단 운영비의 세부예산안 내역은 박스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단 운영비가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반영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4월인 점을 감안하여서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이후 6쪽부터 햇빛소득마을 추진 경위와 전체 사업개요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2025년 12월에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방안 보고가 국무회의에 되면서 2026년 2월에 행안부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출범하면서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당겨쓰고 있는데 아마 이후에 이 사업이 확산되면서 선정과 관련된 예산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의견을 제안하셨고.

실제 선정 예산은 추진단을 통해서 선정하는 예산만 행안부에 포함돼 있고 실제로 그 선정된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금 등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햇빛소득마을 확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든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 반영 필요성에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이 돈이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6억 1700만 원을 왜 신규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26년 3월에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를 공고했다면서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공고했는데 그 절차를 밟으면 되지 왜 이것을 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아무래도 좀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신청받아서 평가를 좀 제대로 하는데……

○서범수 위원 그러면 평가비용도 없이 이것을 공고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현재로서는 예비비……

○서범수 위원 지금 이대로라면 선정 공모만 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돈 없어. 평가할 돈 없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돈이 없어서 지금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공여지책에 있어서 추경이 있으니까……

○서범수 위원 그것을 왜 자꾸 추경에 넣고, 지금 안 맞는 추경에.

○이달희 위원 예비비 쓰세요.

○박정현 위원 맞아요, 이 추경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이것은……

○서범수 위원 이러니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고동진 위원 이것은 전쟁추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금액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전쟁추경하고 관계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석유 의존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을별로 태양광을 활용하게 되면 에너지체계가 전환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것을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그것을 전쟁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차관님, 이것은 예비비 쓰세요. 기 준비된 돈 쓰세요. 뭘 이것을 넣으려고 그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예비비 해야 되는데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예비비 쓰면 되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행안부도 지금 예비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미안합니다만. 실컷 공고해 놓고 공고 이후에 평가용역 비용이 없으니 추경에 넣어서 좀 합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 행안부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양부남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공고하고 이런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부는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햇빛소득마을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것은 수석전문위원 설명드렸듯이 당초에는 기후부하고 농림부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방정부랑 같이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행안부로 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행안부가 일부 역할을 나중에 물려받은 것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2월 달에.

○박정현 위원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기후에너지부 사업으로 잡혀 있었던 것인데 이게 햇빛소득마을 추진으로 가면 실제 지방정부 자체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로 이 사업이 넘어왔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기후에너지부도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더 증액을 하고 있는데요, 한 28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 플러스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이 부여가 되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당초 500개 정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더 많이 확산해 나가는, 700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려는 수정·변경이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이것은 명백한 전쟁추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쟁추경의 핵심은 에너지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잘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 이런 것 시골에 가서 보시면 태양광 업자만 지금 좋은 방식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햇빛소득마을을 통해서 하면 실제로 태양광도 설치하면서 사실은 그 마을에 소득도 떨어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관련해서는 대응 대책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행안부로 이게 최근에 넘어오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 같으니까요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사업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일단 제가 2019년에 국산 셀 보급률이,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아마 90% 이상 다 중국산에 뺏겼지요, 인버터도 마찬가지고 모듈도 마찬가지고. 모듈은 한 60% 정도 버티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이것을, 그러니까 태양광을 많이 하면 중국이 돈을 벌어 간다 이렇게 논리를 접근할 게 아니라…… 에너지가 안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랑 죄다 수입해 오다가 호르무즈해협 하나 막히니까 비료는 어떡하냐 석유는 어떡하냐 비닐봉투도 못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광이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면 중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원전 설치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원전을 만들어서 가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닥치는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게다가 ESS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보급률을 늘리려면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하는 태양광이라든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고 업체들이 배터리를 만들고 ESS를 갖추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셀, 모듈 이런 것들을 다 국산화하도록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 태양광을 설치할 땅을 내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돈을 벌어서 준다는 표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마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햇빛소득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햇빛소득마을이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여기저기 할 테고 여기저기 하고 나면……

저희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권에 사는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로 해서 이런

것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 알려져서 태양광의 보급이 늘어나면 우리가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액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차관님,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아무것도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행안부는 예산이 없고요. 기후부하고 농림부에는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있었지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우리가 종합 조정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별 사업을.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신규사업이 없었던 거지요, 26년 예산에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안부는 없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없었지요, 그래. 그런데 하다 보니 기후에너지환경부 쪽에서 하던 일을 행안부에 넘겨서 평가를 해서 사업 집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금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그 돈을 받아 오세요. 그쪽 돈을 받아 오면 되지, 그쪽에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이 예산은 없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사업 하지 마세요. 왜 본예산에 없는 사업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기후부하고 농림부는 사업 자체를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업자를 한다거나 계통을 하는 건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마을 단위로 조합을 만들거나 이래야 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쪽에서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다 신청하면 쥐요? 아니잖아요. 선정을 할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막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하는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절차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현재는 그것이 행안부로 다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 절차에 드는 비용을 받아 오면 되지 왜 그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그렇게 하면 500개, 700개씩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마을 주민들이 투자를 해야 거기서 이득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정부하고……

○서범수 위원 제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선정·공모에 대한 비용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서범수 위원 차관님, 원활하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여튼 선정·공모를 하고 그 이후

에 평가하는 데 드는 부대비용이나 이런 걸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 비용 있잖아요.

아니, 제 이야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든 그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야기할 건 아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선정을 하고 공모를 하면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고 평가단을 만들어서 이 업체, 이 업체 선정을 할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왜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거기서는 자기들이 좋은 자리를 찾아서 하나씩 확산시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정하기까지는 부대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행안부에서 받아 와서 선정을 하면 되잖아. 왜 자꾸 그거는 그것대로 놔 놓고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사업 벌이고 그 사업 한다고 용역비 또 달라 하고 왜 그래요?

○소위원장 양부남 지금 햇빛소득마을 선정 신청을 받고 햇빛소득마을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고 신청한 마을이 적정한지 용역을 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다른 부처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없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지금 서범수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게 그거예요.

○서범수 위원 받아 왔다는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소위원장 양부남 언제 받아 왔어요, 그것을?

○서범수 위원 2월 달에 받아 왔다는 것 아닙니까, 3월 달에?

○소위원장 양부남 그것을 금년 2월인가 3월에 받아 왔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양부남 그래서 예산에 못 넣었던 것이고 금년 2월에, 3월에 그것을 받아 왔어요. 받아 온 이유는 행안부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양부남 좋아요. 그것까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예산을 못 넣었어.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양부남 그런데 현재는 이 사업이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돈을 아껴서 뭔가 이체를 해서 쓰고 있겠지,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 내가 알기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직원들이 와 있다 그러던데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일부……

○소위원장 양부남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든지 이것도 다 행안부에서 예산에 없던 돈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경이 안 잡혔으면 이런 상태로 가겠지,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가겠지. 가게 되면 이 추진단이 원활한 운영이 안 되겠지. 추진단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된다면 이러한 당초의 목적인 햇빛마을 선정 절차가 지연

된다 이겁니다. 이 지연은 바로 뭐냐, 에너지 대책이 미흡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늦어지게 됩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늦어지는데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 추진단의 활동·사업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받아내야지만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그 래야지만 에너지 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행정의 제일 문제가 뭘 줄 알아요? 업무는 가는데 사람 안 가고 예산이 안 간다. 업무 가면 사람 가야 되고 예산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가 행안부로 넘어가면 그 예산과 인력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왜 그거는 스톱시키고 새로운 돈을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사업비는 기후부라든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서범수 위원** 알아요. 아는데 자기네들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선정하기 위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받아 오세요, 사람도 받아 오고. 왜 자꾸 업무만 넘어가고 예산과 인력은 안 넘어가느냐고.

○**소위원장 양부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행안부로 넘어오면 인력도 오고 예산도 와야 된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건 지난 문제고……

○**서범수 위원** 아니, 이제 시작하는데, 지난 게 아니라.

○**소위원장 양부남** 이미 업무가 넘어왔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내가 길게 얘기하면, 태양광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짧게.

어저께 목포MBC에서 뉴스 기사가 나갔어요. 혹시 들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햇빛소득마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 기사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전남의 수요조사 기준에서 실제로 계통 인프라가 가능한 게 전체의 한 2~3%에 불과하다. 즉 태양광 생산해도 송전망이 없어서 문제다. ESS가 대안이지만 아직은, ESS 아까 김성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안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전고체 정도 가야 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지역에서 체감하는 현실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기후에너지 그쪽에서 행안부 쪽으로 넘어온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거 아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 쫓아오고 이걸 행안부에서 덩석 붙잡는 것조차 굉장히 우려는 하는데 저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사람도 안 오고 예산도 안 주고 일만 하라고 그러는 것은 난 좀 굉장히 이상하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람은 왔습니다. 예산이 좀 없는 거지요.

○**고동진 위원** 그리고 목포MBC 기사를 잘 보시고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데서 말 그대로 내가 에너지 생산하는 거 한전에다가 팔고서 좀 디스카운트 받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어디다 갖다 파는 거거든, 중간 그 회사에다가. 그러면 송전망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지금 공부가 안 돼 있거든, 행안부가. 그 부분까지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 부분은 공부해 가면서 하는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그래서 계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부가 해결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고 또 그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가 ESS를 마을 단위별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동진 위원** 난 큰 걱정되는 게 ESS에서 화재 한 번 나면 이거 또 발각 뒤집힐 거거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초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일단 보류합시다.

○**박정현 위원** 아니, 고동진 위원님이 찬성하신다 했는데……

○**소위원장 양부남** 보류합시다.

다음, 5번.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7쪽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10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자는 제안이 신데요. 이 예산도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안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박스 내용 보시면 체납관리단을 1인당 월 250만 원, 2000명, 4개월 그리고 국고보조율을 50% 해서 100억 원이 산정돼 있고 그다음에 홍보비 등 직접사업비를 위해서 1.8억 원 해서 101억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이시고 이거는 정부 전체적으로 조금 애기…… 지금 국세청 소관으로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은 정부안으로 추경안에 편성돼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차질 없는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증액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이거 차관님이 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을 일부 하고 있지요, 지방세 말고? 그러니까 국세는 하고 있어서 지방세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세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 거지요? 이게 얼마 넣으면 얼마나 세금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세는 한 5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더 확산시켜 나가는 거고요.

○김성희 위원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그러면 500명 해서 얼마나 걷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9500명. 아, 국세요?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500명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었냐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도 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건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재정당국이 이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돈을 넣어서 더 많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낸 사람들, 체납한 사람들 돈을 수거해 오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인건비로 얼마를 했다고요, 1인당? 월 250만 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김성희 위원 그래서 이분이 1000만 원 세금 걷어 오면 되는 거잖아요.

재정당국의 반대 이유가 뭔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걷는 거니까 지방정부가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게 기획예산처의 입장입니다. 국세를 체납 관리하는 것은 국세니까 9500명 이번 에 반영해 주겠다, 그런데 저희는 100%는 아니고 50%고 지방정부별로 이게 열악해서 못 걷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김성희 위원 차관님 말씀은 말은 그렇게 하기 쉽지만 실제로 공무원 지방에서 지금 사람 데리고 돌리기도 어려운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어렵습니다.

○김성희 위원 편성하기 어려우니 이것을 여력을 뒀서 더 추경해서 국고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차관님, 우리가 국세·지방세가 75 대 25쯤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국세를 걷어서 지방에 많이 내려보내 주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이 더 많다고……

○서범수 위원 4 대 6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지방세 걷어서 중앙정부로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없고……

○서범수 위원 없지요, 그런 것은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세외수입에 한해서는 같이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걷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가 지방세를 많이 걷어서 그 돈은 내 돈이야,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어디 중앙정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앞에 물어본 건데……

당연히 나는 맞다고 봐요.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비 들여 가지고 많이 거두고 그다음에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걷어서 자기 수입으로 쓰잖아요.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지,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자기네들은 열중쉬어 하고 이것을 국가에서 돈을 좀 더 받아서 인력을 만들어서 지방세 수입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한테 들어오게 한다? 그것은 좀 모양이 안 맞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다만 지방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열악하지 않습니까?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걷어야지요, 자기네들이 좀 투자를 해서.

○소위원장 양부남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걷는데, 50% 정도는 지원해 달라는 게 지방의 의견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알아서 하라고 기획예산처에서 자른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양부남 지금 지방세니까 지방에서 돈 들여 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걷을 수 있는 여력과 조건이 안 되니까 더욱더 돈을 못 걷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라의 도움을 마중물로 해서 여기에다 지방이 좀 보태 가지고 많이 걷어 내면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국세에서 부담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세 체납지원단은 이미 운영되어 있고 이제 확산한다는 거고, 지방세 체납지원단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과거에 성남시라든지 경기도같이……

○박정현 위원 몇 개의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재정 여건이 좋은 데가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 바가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냥 단면적으로 보면, 아까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찌 보면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구조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세 구조가 훨씬 많고, 그래서 재정분권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재정분권 전에 지역이 고사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드는 거고.

실제로 지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 하는 지방정부가 한 4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더.

○박정현 위원 이런 지방정부에다가 너네 고기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많이 해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서 지방세를 많이 걷으라는 이야기지.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서범수 위원 왜 여력이 없다고 그러세요?

○**박정현 위원** 지금 공무원 인건비 주기도 어려운 곳인데……

저도 단체장 해 봐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초기에 중앙에서 좀 투자를 해 주면 계속 투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 하고 그리고 재정 여건이 좀 만들어지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마중물 역할을 어쨌든 중앙정부가 해 줘야지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 곳에서 뭘 하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력을, 어쨌든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여건이 성숙되면 그다음에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초기에 여건 만들어 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것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서범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지방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 건겠다고.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50%라도 지원 해 주면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하지, 이것 100% 막 의무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소위원장 양부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저도……

○**소위원장 양부남** 이달희 위원님 먼저 손 드서 가지고.

○**이달희 위원** 제가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때 이 사업을 하길래 굉장히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뉴스를 찾아보니까 ‘전쟁추경에 이재명 사업 수두룩’ 이게 타이틀이 눈에 띄어서 보니 경기도에서도 투자 대비……

국세청이나 지방세 징수과가 있고 다 있잖아요, 시군에도 다 있고. 그러면 이제 지방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따로 돈을 들여서 이분들을 고용해서 투자 대비 거두어들이는 국세나 지방세가 성과가 미비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몇 명에 얼마를 투자하니까 국세가 얼마나 건져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분들이 은퇴자라든가 고령 노동자들은 순간적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면 그런 투자 대비……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돈 조금 마중물 들여서 세금 납세 체납하고 있는 것 왕창 걷어 오면 그것 잘한다고 하지만 경기도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 500명도 청년 고용을 처음에는 시작이라고 애드벌륜을 띄웠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은퇴자가 327명, 그러니까 또 이렇게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 걷어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도의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데이터로 이런 성과를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취업해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에 대한 전문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화 돼 있는 건지. 그냥 선거 앞두고 막 이런 일자리, 저런 일자리 지금 엄청 우리 눈에도 보이게 해서 아무나 막 나눠 주는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옛날에 해 봤던 일이라고 해서 성과도 없는 건데, 저는 그때 경기도에서 하실 때 굉장히 신박하다 생각해서 결과가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니까 투자 대비 성과가 미비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말씀을 좀……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님 질문도 비슷한 것 같은데 들어 보시고 종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성남시에 과거 시험운행을 했을 때는 58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155억 정도를 세액을 징수했다고 하고요. 최근에도 성남시는 180억 정도의 징수 실적을 가지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그러면 그냥 지자체에서 하면 되지 않냐, 광역 2개하고 기초 37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어디냐, 경기도의 성남시나 이런 대규모 도시 단위에 있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군 단위는 거의 못 합니다. 여력이 안 되지요. 그래서 지방에 있으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해 봤어요. 이것을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 지금 전쟁추경이라고 수입을 얻을, 지방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됩니까? 지방세 수입하고 이런 것 수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경에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대단히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수치상 문제가 있나요?

○**소위원장 양부남** 두 분의 질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제가 성남시하고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는 가지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합치면 소액 체납은 2155억 원을 징수했고 여기에 관련된 공공일자리는 5807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자 2887명을, 또 이게 뭐냐면 체납한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도 못 한 분들도 있고 또 진짜 어려워서 못 한 부분들은 복지 사업과 연계를 시켜 주는 복지정책도 연계가 됩니다. 단순히 ‘세금만 빨리 내세요’가 아니라 그런 직간접적인 연계효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하시면 이 자료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개 시도 몇 개밖에 안 되냐면 사실상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면 지방세를 담당하는 분들이 총괄팀장 하나랑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지방정부의 규모가 작은 데일수록은.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성남 같은 경우는 과라든지 체납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보지 못한 거고요.

사실은 지방세징수법에 체납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계끔 명문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이 전국 단위로 조직돼서 활성화된다면 지방세 실태라든지 소액고지서 발급, 영치, 징수 이런 부분도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행정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다른 위원님들 이것……

고동진 위원님 한말씀하시지요.

○**고동진 위원** 국세채납 징수 내용을 저는 좀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위험도 따르고. 그래서 여기에 지방세 채납을 젊은 사람들을 해 가지고 2000명을 해서 4개월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걸리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도 이렇게 나누어지면 두세 명씩밖에 안 됩니다, 1개 시군구 단위에.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떼어먹은 돈 또는 오랫동안 안 내던 돈을 가서 받아 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도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을 다 알고 이 계획을 세운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이게 가서 말씀드렸지만 직접 방문도 해야 되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또 복지 혜택을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계시켜 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수가 많이 걷혀 가지고 이런 것을 전쟁추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하고 싶지 않은데……

○**박정현 위원** 한숨을……

○**고동진 위원** 지방…… 왜냐하면 국세채납에 대한 징수의 효과는 분명히 검증된 사례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은 필요하겠다.

○**소위원장 양부남**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그런데요 금방 우리 고동진 위원 말씀대로 이게 지금 목적이 뭐예요? 지방세 수입을 많이 걷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들이나 일자리 고용 창출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시지 말고…… 금방 이야기가, 저도 그런 계통에 있었지만 이것 하나하나 한 가정에 가서 파악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인데 그냥 4개월 고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면서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를 들어 분할납부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설명해 줘서 조금씩 조금씩 낼 수도 있고……

○**서범수 위원** 사람을 만나야 될 거잖아요, 사람을 일단?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 사람을 못 만나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지요.

○**서범수 위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그런 분들도 잘하기는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거야말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요. 그런데 달랑 4개월 고용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너무 비현실적이라고요, 이게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것 여기 통과해도 기획예산처 통과 못 해요. 다 기획예산처에서 잘린 거 지금 다시 살려 가지고 오겠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좋다, 우리가 여기서 오케이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또 예결위 가서 기획예산처에서 잘리면 우리 행안위도 문제가 생겨요. 시쳇말로 쪽팔리잖아.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한번 올려 보자 그리고 잘리고 또 잘리고……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좀 이야기합시다, 차관님. 행안부의 입장은 내가 이해는 하나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이론적이고 책에 있는 이야기만 해 가지고 이게 되냐고요, 지금.

○소위원장 양부남 여기도 보류합시다.

○박정현 위원 다 보류래.

○소위원장 양부남 오늘 저녁까지 합시다.

○고동진 위원 문을 따고 들어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일단 저는 보류했는데 그런 효율을 따지면 우리가 체납관리단을 모집할 때 엄선하면 되지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을.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이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소위원장 양부남 그런데 그게 일자리 창출하고는 연동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 특화된 사람을, 경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지.

○김성희 위원 차관님, 이것……

○소위원장 양부남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6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8쪽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 추경으로 4조 8251억 8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고유가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해서 한 60만 원씩 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54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시고요. 고유가로 피해받는 피해자 90만 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실효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지금 현재 추경안에 성과분석을 위한 예산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 감안하셔서 보시고요.

아울러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비도 2억 원이 반영돼서 저희 국회를 통과했었는데 그때도 이게 집행기간 이후에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당년도 연구용역비 쓰기에 충분한 시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9쪽에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부대비용 52억 7500만 원 중에 현장점검 여비, 범정부 TF 운영비 등 운영비 명목 예산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사업비 내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로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인원이 이 업무를 한다고 치면 별도의 인건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 1억 352만 1000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다른 고유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이라든지 국가재정 여건을 다 함께 고려해 주신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 원안 유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돈 엄청나게 올렸네, 5400억.

○**서범수 위원** 좀 더 올리려고.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서범수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다른 추가, 화물차 운전자, 택시, 택배 이런 것은 국토부나 다른 소관 부서에 이미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석유 최고가격제 그리고 대중교통 환급 지원, 에너지바우처, 유류세 이런 부분이 다 소관 부처에 일정 부분 담겨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게 안 담겨 있지요. 석유 최고가격제는 주로 어디의 손실을 해 줘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4개 정유사에 보전해 줍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 4개 정유사한테 주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 하면 진짜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핀셋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지금은 소득하고 지역에 따라서 기준을 정했다는 말이지요, 정했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화물차라든지 택시라든지 택배라든지 푸드트럭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두텁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전 국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유회사한테 손실보전을 주는 거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만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거지요.

○**서범수 위원** 그게 결국 국민들한테 주는 거지만 내가 받는, 체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물차나 택시, 택배, 푸드트럭 전체적으로 몇 명인가는 나오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유류지원비가 리터당 얼마 넘어가면 리터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그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행령인가 법을 개정해서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회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서범수 위원**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저는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없다 그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지금 제도도 화물트럭 운전자들한테 유류보조비를 주는 게 있는데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제 기억에 리터당 183원이었는데 그것을 더 주자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가 후속조치 하는 걸로 제가 그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확인해서 이야기합시다.

○**소위원장 양부남** 서 위원님, 이 증액, 푸드트럭, 화물차 이분들 일반적으로 이번에 국민들 보전되는 돈 그 외에 주자는 것이지요?

○서범수 위원 예, 그 외에 추가로 하자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담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저희가……

○박정현 위원 소관이 아니라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행안부가, 화물트럭 운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방정부가 주기가……

○서범수 위원 언제는 행안부에서 온갖 것 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 못 하겠다고요?

○소위원장 양부남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서범수 위원 온갖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다 갖고 오고, 다 갖고 오더라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잘할 수 있는 것은 갖고 오는 건데요.

○서범수 위원 뭘 잘해요, 또 그걸.

○소위원장 양부남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거지.

○서범수 위원 이것도 사실은 지금 어느 부처가 안 정해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그것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그건 확인해 볼게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이 대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것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52억 운영비용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이것 2025년 추경 때도 우리 예정처에서 나온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재난지원금과 금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은 사실상 기본 설계가 동일하고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매번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행한 후 폐기하고 다시 신규 구축비용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게 그때도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안 고쳐, 아예. 이번에도 52억을 또 만들어요. 시스템상은 비슷한데 한 번 쓰고 폐기하고 또 50억을 들여서 또 한 번 쓰고 폐기하고, 이게 행안부가 이래 합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은 작년에 할 때도 민간 클라우드를……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시스템상 비슷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계속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시로 운영을 하는데 그때도 일회성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요.

○소위원장 양부남 지금 서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주장하시는 것이예요?

○서범수 위원 예, 감액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행안부는 눈도 하나 깜짝 않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예상이 됐었다면 저희가 작년에 하고 계속 유지를 했을 텐데……

○서범수 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춰진 시스템은 있을 거잖아요, 하드웨어 있을 거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하드웨어를, 고동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 클라우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는 그 클라우드를 저희가 그때 빌린 겁니다, 임차를 해서.

○서범수 위원 여기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데이터구축 1식 5억 2030만 원, 유지관리 1식 2억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 지금 되어 있을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지요. 그 기간 동안은 되어 있다가 끝나면 그걸 또 거기서 다른 쪽에 돌려쓰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고동진 위원 임대예요.

○서범수 위원 임대 이걸 아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민간 클라우드라는 게 우리가 장비를 사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장비는 거기서 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보안, 통신, 서버 이런 것을 구축해 왔다가 저희가 쓰면 그 기간 동안은 10개월 쓰고 안 쓴다 그러면 다시 그걸 해서 자기들이 재임대하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때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자산취득비 75억 들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공공요금으로……

○서범수 위원 자산취득비인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때……

○서범수 위원 하드웨어 도입 비용,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그래서 75억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 다시 설명드리면 당초 코로나 시기 때는 실제로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했는데, 25년에는 자산취득으로 하려고 했다가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니까 클라우드로 해서 임차를 했지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고요.

○서범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편성 내역, 자산취득비 75억.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5억 자산취득비를.

○서범수 위원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어.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50억이면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는 있으나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같으면 이것 이렇게 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도 참 이게 아까운데……

○서범수 위원 실제로 지금 52억이 들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측 가능성이 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께서 5400억은 증액하시고 방금 그 부분을 얼마를 감액하신다는 겁니까?

○서범수 위원 여기에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 화물차……

○소위원장 양부남 이것 감액은 대충 설명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예산도 이전용하고.

○서범수 위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위원님, 올해는 자산취득비가 없고요. 클라우드 이 용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52억 들어가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400억을 늘리자 했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7398억 정도 더 늘려서 가자.

○소위원장 양부남 7398억.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자꾸 지방비 매칭하는 것 80 대 20 이게 오히려 인구소멸·인구감소 지역은 혜택이 더 많으니까 지방에서 비록 20%를 하더라도 더 큰 금액이 나오잖아요. 더 큰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지역 내지는 인구감소지역이라서 재정 여력이 더 없다. 재정 여력이 없는데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지방교부세를 많이 주는데 1.3조 정도 이 감당은 지방에서 충분히 하고 훨씬 더 지방 재정 여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준과 지역과 소득에 따라서 점점 획일화된 게 아니고 차등화시켜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감소지역은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6.1조고요. 4.8조가……

○서범수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기본 10만 원 주잖아요. 서울 같으면 10만 원의 30%, 지역은 20%. 그런데 저쪽 가면 4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60만 원까지 갑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력이 더 없다고요. 그러면 10만 원보다는 45만 원에 대한 20%가 훨씬 더 포션이 크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말씀은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채까지도 발행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분석을 해 봤을 때 교부세가 가는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하고 교부세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데 더 많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보면 지방이 20%만 대고 80%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이 많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더 많은 국비를 받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부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확인해 봤지만 지방비 부담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다.

○서범수 위원 딱 지금 차관님이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딱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너무 박절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안 하겠다는 데는 지금 없고요, 다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할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됴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여력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진다. 물론 지방교부세를 더 주든지 말든지,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소위원장 양부남**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회의가 결정이 안 나니까……

지금 서범수 위원님께서 7398억을 증액하겠다는 의견을 내셨고,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좀 낮추자. 20%? 80입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8 대 2고요, 서울만 7 대 3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런데 지방정부를 8에서 좀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서범수 위원** 지난번에 90% 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90%.

○**소위원장 양부남** 증액하는 것은 자료를 봐서 하시고,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행정의 일관성을 또 국회의 위상을 위해서, 지난번에 소비쿠폰 할 때도 똑같은 비율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생각해서 9 대 1로 했었거든요. 저는 똑같이 9 대 1로 국회에서 정해서 올려 보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중앙 9, 지방 1?

○**이달희 위원** 예.

○**소위원장 양부남**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다른 부분 말씀드려도 돼요?

○**소위원장 양부남** 이거 비율부터, 비율 하고 있으니까 비율 한번 토론해 봅시다.

○**박정현 위원** 9 대 1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달희 위원** 교부세 내려가지만 작년에 내려간 게 갑자기 생겨서 지방채 발행하고 이래서 빚도 갚아야 되고 이러니까, 올해도 생각지 못한 재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 대 1로 하십시오.

○**소위원장 양부남** 차관님 의견은 어때요, 9 대 1로 한다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추경을 대응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은 추경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나 국채를 발행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행안위는 100% 국비 지원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예결위에서 8 대 2가 9 대 1로 조정됐는데요.

올해는 다른 게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즉, 26.2조 여기서 국비 부담을 더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게 호트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일단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재정이 어려운 데 보면, 예를 들면 전남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물레이션을 해 보면 이번에 추가로 한 280억의 교부세가 내려가는데 거기서 20%를 부담하는 것은 한 13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정부 측 의견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번 추경예산 특성상.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해 주시면 저희는 항상 지방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기채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양부남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고동진 위원 세수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소위원장 양부남 이것은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서 위원님, 지방을 사랑하시는 행안위 간사로서의 그 마음을 충분히 다 알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의견 더 없습니까?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범수 위원 이거는 뺍시다.

○소위원장 양부남 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운영비 명목 예산 7000만 원 감액 필요에 대해서 고동진 위원님.

○이광희 위원 7000만 원 이것도 뺍시다.

○소위원장 양부남 7000만 원은 너무 적은데 빼기에는……

○이광희 위원 빼요.

○소위원장 양부남 빼?

○이광희 위원 고동진 위원님께서……

○고동진 위원 뺍시다.

○소위원장 양부남 빼는 것을 뺍니다.

○고동진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빼면 안 되는 게 이 7000만 원이 뭐냐 하면……

○소위원장 양부남 됐어요. 시간 없어요,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출장비하고……

○소위원장 양부남 안 빼기로 했어요.

○서범수 위원 안 한다고, 7000만 원을 빼는 게 아니고.

○소위원장 양부남 놀랐어요,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다음에 박정현 위원님 1억 300 이것……

○박정현 위원 이거는 인건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박정현 위원님이 강하게 주장하신다면 이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여야를 대하는 게 이렇게 달라?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삭감을 받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2억 원은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필요 있네요?

1억 350 이것은 감액 안 하는 것으로 한 겁니까?

○박정현 위원 감액해도 된다고요.

○소위원장 양부남 이것은 감액하고, 7000만 원은 감액 안 하고, 2억 증액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7398억 증액하는 것은 더 자료를 받고 말씀하실 겁니까?

○서범수 위원 예, 자료를 받고 합시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일단은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 안부터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양부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0쪽입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자율계정에 47억 1500만 원이 본예산에 있는데요. 지금 부산광역시가 종전 목표를 988개소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잘돼서 연말에 한 2000개소 이상 증가해서 한 3000개소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추경에 포함하자는 안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8억 4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예산 확대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관련해서는 26년도 지특회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시도별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정해서 지출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특회계의 특성상 어떤 특정 지역, 시도만을 별도로 조정하는 것은 또 이 체계가 호트러지기 때문에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오늘 이야기하는 게 다른 예산도 그런 논리로서 많이 접근을 했었으면 좋은데 어디는 된다고 그러고 이런 거는 또 전체 할 때 한다고 그러고 일관된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예산은 포괄보조라고 하는 지특회계 예산이고요. 이거를 뺀 나머지 지금까지 논의된 건 행정안전부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예산입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어느 쪽 예산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서범수 위원 전국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건 1만 1541개소이고요. 부산은 988개를 하겠다고 해서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000개로 더 늘리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런데 부산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판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를 전체를 늘리는 거라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거나,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걸 따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한 군데만 늘리자라고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제가 쉽게……

○이광희 위원 여기 대전으로, 충북까지만 떼어서 해 주시지요.

○서범수 위원 이성권 의원님 안이라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이게 정부 측 의견은 전체적인 틀이 깨진다 이거지요, 여기만 한다는 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고동진 위원 그러면 전체……

○소위원장 양부남 전체를 다 해 줘?

○고동진 위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 고려할 때 다시 검토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소위원장 양부남 부정적 의견이다 이거지요. 정부 측, 그런 것 같은데?

○고동진 위원 정부에서는 이걸 따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 더 주고 말고 고려대상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부산이나 특정 지역은 빼고 이 착한가격업소를 늘려라, 그거에 대한 예산을, 그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재정당국에서는 포괄보조 10.3조를 벌써 다 찢기 때문에 또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부산 빼고, 그러면 부산이라고 하는 건 빼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특정 지역 거론하지 않고 그걸 한번 검토나 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리고 이것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게 다만 지방에서 무한대로 하지 않고, 이게 5 대 5 매칭이다 보니까 작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 본인들이 50% 부담하는 한도 내에서 부산도 988개 신청한 거고 다른 지역도 다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47억 이걸 더 넣는다라고 해도 49억 정도 되는데요. 이걸 넣는다 해도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매칭이 될지는 추가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범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성권 위원이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건 부산은 이제 점점 많이 늘리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 넣을 때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할 때 그걸 해서 더 집어넣어라 하는 거는 재정당국과 열심히 해서 988개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이 사업은 다음 예산 때 잘 반영하도록……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내년도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이거는 증액하지 않는 걸로 결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부대의견 총 여덟 건인데요.

1번 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이고요.

두 번째,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관련 타 부처가 수행 중인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청년들이 5개월 단기근무 이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속성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사업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고 청년인구의 지방 유입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라는 의견 제안이 하나 있고요.

다음, 3·4·5·6번은, 8번까지는 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사항인데요. 그중에서 3·4·5·6은 지방비 매칭과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률과 관련된 의견들인데 워딩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고드리면 3번,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비지원 비율 상향을 검토한다’.

4번,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비 지급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5번,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지역별로 지급액을 차등화함에 따라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한다’.

6번,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하나로 뭉쳐서 부대의견을 하나 채택하셔도 무방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7번,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과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확립한다’.

8번,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사용처를 설정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럼 부대의견 1번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1번, 2번은 이견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3번, 4번, 5번, 6번은 보시면 좀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3, 4, 5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대안으로 말씀드릴 게 3번, 4번, 5번이 6번하고 유사한데 6번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표현만 빼면,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로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번·8번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두 분이 어떻게 합의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위원장 양부남 부대의견 끝나고 중대발표를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2번, 사회연대경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아까 차관
께서도 얘기했지만 나이 만 39세 이하로 해서 굉장히 엄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랬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회 위원님 주신 것 꼭 반영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
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법안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부대의견에다가 꼭 집어넣
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속기록도 다 남고요. 제가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절할 생각이 전혀 없네
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가 위원님들 의견이 무슨 뜻
인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8 대 2 구조를 유지해 주시는 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편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용 편의라든지 지금 주
신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지금 이게 빨리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
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아마 재정당국에서 도저히 수용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사실은 80 대 20 하다가 90 대 10으로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차
피……

○소위원장 양부남 차이점은 오전에 설명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수용할 것이냐는 별도
로 설명은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부대의견 대안으로 해 주신 것 하시면 또 본회의나 이런 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1번은 수용하고 2번에 대해서는 수용하되 39세……

○고동진 위원 미만.

○소위원장 양부남 미만.

○고동진 위원 아, 이하로.

○소위원장 양부남 이하, 차관님,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양부남 39세 이하로 하고.

3·4·5·6은 통합해서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서범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언제 분석하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것 아직 분석도 안 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예산이 확정돼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80 대 20 정도 되면 어떻게 어떤 부담을 지고 어떻다는 것 나오잖아요. 그것 해 와야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가내시해서 사실 지방정부에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얼마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이 재정부담 분석은 즉시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성과 평가라든지 2억 원이 평가 용역에도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재정부담을 즉시 분석해서 행안위에 알려 주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6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즉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7·8 부대의견은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된 안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3번,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협의하기는 2개 안을 다 올리는 것입니다, 감액안과 증액안을.

○박정현 위원 전체회의에요?

○서범수 위원 예결위.

○소위원장 양부남 감액안과 원안, 증액안이 원안이지요.

○서범수 위원 지난번에도 그때 소비쿠폰인가 할 때 그렇게 해서 2개를 보내 버렸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결정해라.

○소위원장 양부남 차관님, 어떠세요, 감액안과 원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

○이광희 위원 아니요, 이거 여기서 이미 다 되고 한 분만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고동진 위원님도 찬성인데 이것 표결하지시요.

○소위원장 양부남 그럴까요?

○이광희 위원 이것 혼자만 반대하셨는데 이것을 올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까 고동진 위원님도 이것 하자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달희 위원님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셨고. 한 분이 반대를 하면 무조건 다 올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 표결하세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다시 의논하고 올게요.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십시오. 저는 가급적 표결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세요. 하고 오십시오.

○이광희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분이. 혼자서 반대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서범수 위원 혼자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의논하고 올게요.

○이광희 위원 아니, 각자 위원들의 입장이 있는데 지금까지 입장 오전 내내 얘기를 해 놓고서는……

○서범수 위원 입장이…… 누가 뭐라 해요?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그러면 우리 쪽 의견을 협의를 봐야지.

○이광희 위원 위원님, 이렇게 하면 반칙이지.

○서범수 위원 무슨 반칙이에요? 왜요?

○이광희 위원 위원님들 세 분이 반대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어도……

○서범수 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의논하고 올게요.

○이광희 위원 아니, 아까 다 찬성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양부남 속개를 선언합니다.

○서범수 위원 아까 위원장님하고 의논한 대로 갑시다. 안 그러면 표결하세요.

○소위원장 양부남 3번, 전액 감액안과 116억 1900을 증액하는 안을 동시에 올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고동진 위원 찬성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시지요.

○이광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표결하세요.

○서범수 위원 한 사람만 반대하네요.

○이광희 위원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한 사람이 반대했던 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요, 이 안에 대해서.

○서범수 위원 아니지요. 우리 다 하고 왔잖아요.

○고동진 위원 두 분이 합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둘 다 올리자……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의견을 왜 얘기를 하냐고.

○소위원장 양부남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이광희 위원님 좀 양보하셔……

○박정현 위원 둘 다 올리시지요.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감액안과 증액안을 동시에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번, 햇빛소득마을 확산은 6억 1700만 원인데 3억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고동진 위원 좋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가능해요, 3억?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5쪽에 보시면 6억 1700 중에 용역비를 살려 주시면

3억 31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운영비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다른 데서 해서 쓰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아껴서 쓰더라도 용역비만 해 달라.

○박정현 위원 3억 얼마?

○고동진 위원 3100.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3억 3100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다음, 5번 사업입니다.

5번 사업은 지금 매칭 비율이 국비·지방비 50 대 50인데 지방이 6을 부담하고 중앙정부 4를 부담해서 6 대 4로 조정하는 걸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고동진 위원 금액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양부남 5 대 5에서 6 대 4로 하려고.

○서범수 위원 그러면 101억이 조금 줄어들지요.

○소위원장 양부남 이것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60%가 지방……

○서범수 위원 60%를 지방이 하고 국비는 40%만.

○소위원장 양부남 60%가 지방, 정부가 40%.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6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7398억 증액안과 그다음에 정부 원안 2개를 다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증액안과 정부안 2개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9쪽의 민간위탁사업비 인건비 1억 352만 1000원 감액하는 것은 그대로 아까 결정하신 대로 하고요?

○소위원장 양부남 감액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6번 사업은 7398억 증액안과 그다음에 정부 원안, 거기에서 1억 352만 1000원을 감액한 것,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심사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양부남** 다음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항상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인사가 간단해서 좋습니다.

전문위원께서 1번, 산불피해 추가지원 전담인력 지원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 추가지원 전담인력 지원 신규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산불피해 추가지원 신청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인력 배치에 필요한 11억 4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는 일부 수용입니다.

지금 지방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 자체가 지금까지 지방에서 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하더라도 국가하고 지방이 역할 분담을 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 생각에는 일단 지방과 국가가 5 대 5 정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정부가 5 대 5 하자는 재정지출의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특별법 만들면서 우리가 지원·재건위원회의 활동을 지금 지원하는 일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이번에 1차 대형산불 난 3개 도 8개 시군에 그동안에 비해서 이 산불을 기후위기에 의한 천재지변처럼 해서 크게 지원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으로 우리가 국무총리실 지원·재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피해 규모를 받고 있잖아요. 받는데, 최소한 한 읍면동에 2~3명은 꼭 필요하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인데 이 정도는 국무총리실의 재건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인데 한시적인 역할, 그것도 연말까지인데 굳이 5 대 5로 하는 것보다 위로금을 뿌려서라도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소위원장 양부남** 지금 5728건이 접수됐지요?

○**이달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아, 시작이에요? 몇 달 만에 이렇게……

○**이달희 위원** 12월 말까지, 내년 1월 중순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소위원장 양부남**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신청이 된 것입니까?

○**이달희 위원**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하니까 한 분이 오면 2시간 내지 3시간을 상담을 한답니다. 그게 서류만 내고 가는 작업이 아니고 오셔서 면담을…… 그래서 저는 이게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 주는 마음의 치유 역할도 겸하고 있다, 그래서 꼭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는 것에는 행안부에서도 공감할 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지금은 5개 군?

○**고동진 위원** 5개 시군.

○**소위원장 양부남** 5개 군의 이 읍면에서는 직원 한두 명이 이 업무를 합니까?

○**이달희 위원** 예, 그냥 임시직을 좀 들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연말까지, 다 받을 때까지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임금도 최저임금으로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시군에서 보태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양부남** 고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진 위원** 이게 제 지역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여기 산불 났었을 때 안동하고 의성을 갔었어요. 그 현장을 내가 갔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바람이 그때 많이 불어 가지고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인데 아까 이달희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쪽에 계신 어른들에 대한 위로 성격도 있고—물론 여러 가지 지원은 됐지만—큰 금액 아닌데 이것을 꼭 지금 5 대 5, 국비하고 지방 나누기보다는 이번에 한해서 그냥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민주당 위원님들 한 말씀하시지요.

○**김성희 위원** 이달희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그러면 이것은 11억 4000만 원 전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소위원장 양부남** 예.

○**이달희 위원**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예결위에 삭감이 안 되려면 지방에서도 같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재정원칙이나 이런 것도 맞기 때문에, 저희는 경북도나 이런 데를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갔을 때 재정당국에서는 이 업무 소관이 누구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저희가 좀 궁색해지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가서 잘 방어하려면 ‘지방도 같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달희 위원** 가서 노력하셔서 해 주세요.

○**소위원장 양부남** 가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양부남** 이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추정안을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는 김민재 차관을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부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위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전체회의 의결에 필요한 심사보고 자료 작성과 부대의견 자구 수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동진 김성희 박정현 서범수 양부남 이광희 이달희 채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정책기획관 이지성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경북·경남·울산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재건지원단장직무대리 이상원